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김재열



얼마 전 실시된 한 여론 조사 결과, 가장 부끄럽고 불합리한 직업군으로 정치인들이 뽑혔다.

특히 경제인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높다. 지난 1995년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공무원은 삼류, 정치권은 사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세종시 정치로 풀어야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내 정치판과 거리를 뒀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일방 통행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정치가 생략된 탓과 무관하

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한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적 차원이 아니고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차원인데 뜻밖에도 너무 정치적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 가운데 정치적이지만 않은 사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 전체를 100%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4流 정치’도 필요하다

치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속내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가 정책 가운데 정치적이지만 않은 사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종시가 말로 정치로 풀어야 할 현안인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에서도 충청권과 영·호남권 등 지역별 이해 득실과 한나라당내 역학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정치나 행정과는 간극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 전략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탁월하다.

이미 확정된 원전 수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현지에 날아가서 한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여의도에 또 다시 광광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의 당사자로 전락한 지 오래다. 여당 내에서는 계파 간 날선 공방으로 “담을 쪼개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분쟁 당사자

남처럼 얽혀 있는 대립과 반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새 상품을 판매하듯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부 정책을 던져 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식의 대국민 협박성 발언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정치는 필요악이다. 귀찮고 번거롭다고 현실 정치를 외면한다면 원만한 국정 수행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비록 4류 수준에 불과할지라도 정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논설위원> ajkim@kwangju.co.kr

국의 저녁 황금 시간대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설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편지를 주고 받았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50대 인건 시민을 참석시켜 눈물샘을 자극하고 친서민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

상대방이 손을 들 때까지 무한 경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경영이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2등은 사실상 낙오자로 간주된다. 때로는 소수 세력까지 배려하는 정치와는 차이가 많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4월

시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정부가 서둘러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극심한 ‘눈치보기’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고 민간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택지 분양도 전무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계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버금가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고 지원을 통한 땅값 인화가 절실하다. 4천억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조성원가를 3.3㎡당 109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청사 신축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16개 이전대상 기관 중 부지 매입을 마친 곳은 5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전KDN의 경우 지난해 2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여지껏 부지 매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 기관들의 신속한 이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전을 미루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와 같은 강력한 이전촉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러차례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해왔다. 26일 호남을 방문한 정무현 국무총리는 “조만간 공기업 수장들에게 혁신도시 이전을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약속에도 국고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8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설키로 했던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까지의 연결도로(0.89km)는 아직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 교통 및 교육여건 개선없이 건물만 들어설 경우 만족도 시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최대한 억제해야

전기·가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방선거 이후 무더기로 인상될 조짐이다. 해당 당국과 지자체, 관련 업체들이 상당한 원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요금의 무조건적인 억제만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전기·가스·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그동안 경제여건 악화로 온 측면이 있긴 하다.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해 발생하는 적자는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결국 국민의 혈세를 총당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물가 인상과 서민경제에 과급효과가 큰 공공요금이란 한계면에 오를 경우 금융위기의 와중에 부채는 늘고 실업률 상승은 줄어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서민 가계를 더욱 옥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은 생활품을 비롯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 약화→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세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다.

당국은 공공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 상당수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후생복지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 경영으로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환골탈태의 경영 혁신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 가계의 형편에 맞춰 그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눈치 보며 요금 인상을 보류해왔던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선거철이 끝나면 무더기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민 살림살이는 지금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無等鼓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대학가에 사상 유례 없는 취업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요즘 대학생들의 주요 화두는 ‘스펙(spec)’관리라고 한다. 영어 ‘specification’의 우리식 줄임말인 스펙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단 어다. 국립국어원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토의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순화어로 스스로

책임 셈이다. 스펙 쌓기 경쟁은 사교육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전국 대학생 남녀 2천53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 달 평균 27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300여만원에 달하고 졸업기간을 4년으로 치면 1천200만원을 뚫는다.

‘스펙(spec)’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감낭’을 추천하고 있다. 스펙과 ‘높인다’는 뜻의 ‘업(up)’이 합쳐진 ‘스펙업(spec-up)’이라는 용어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은 학력과 학점, 토의 점수를 만들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력서에 다양한 경력을 한 줄이라도 더 써 넣기 위한 대학생들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제2외국어 공인인증시험, 한자인증시험, 한국어인증시험, 국사공인시험 등 전공과 관련성이 모호한 자격증 취득은 기본이고 심지어 외모도 스펙한다고 한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간 1천만원대의 대학 등록금에다 사교육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취업 사교육이 보편화된 것은 우리의 대학 교육이 극심한 취업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학은 취업 준비기관이 아닌 학문하는 곳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의 중요한 책무다. 구직자들도 끈구름 잡기식의 스펙 관리보다는 기본적 인 소양과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고령성 사회2부장 ksgo@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기고

김성술



세종시 건설 중에 정운찬 총리의 등장으로 수정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국론분열과 갈등이 증폭되어 견집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 논거를 제시코자 한다.

세종시 원안대로 가야하는 까닭

한다. 지켜지지 않을 때 반드시 불이익과 고통이 따라야만 권위와 정당성이 확립되어 국가 존립이 튼튼하게 된다. 그 어떤 이유나 핑계라도 피할 수 없는 법 집행은 정당하며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 되어 돌아온다. 신뢰와 법수호차원에서 원안수행이 많은 것을 잃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 여야 합의를 전동화하기 위해서다. 우리 국회는 토론과 타협보다는 정략이 먼저이고, 당의 이익이 우선되어 반목과 파행이 체질화 되었다. 이것을 타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야 합의의 실행의 진통을 확립하고 이것을 통해 상생과 국민을 위해 정책대결이 연결되어 선진국 진입을 유도해야 할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세종시 추진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혼잡과 무질서와 국가위기상황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세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밀화는 세상에서 돌도 없는 수도 분할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해법을 찾았다. 수도 이전의 뜻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가는 정부의 숭신수범이요 시범을 보인 것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의 분이 된 것이다. 수도권 과밀을 막는 것이 행정의 비효율보다 국익에 유익하고 민약의 국가 위기상황을 탈피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며 바른 순서이다. 원안 수행은 바른 순서로 가는 지름길이다.

넷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성경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지금 전국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도시가 분쟁하고 학교나 연구소를 유치하면 연구단지나 학교가 요동하고 있다. 분쟁만을 부채질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그 무엇을 담은 분쟁의 요인을 안고 있다. 국가 지상 명령인 균형발전의 목표를 향해가는 그 어떤 분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은 원안 수행밖에 없다.

다섯째, 정부부처의 위상과 위력을 과소 평가해서 출발하고 있다. 부·처·청은 장관의 감독아래 그 뜻을 받들어 사무를 보는 정부기구다. 그 뜻이 바로 국정이고 국민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처와 관계된 사람이 전국에서 누구나 관심 갖고 정보를 위해서도 찾아가는 곳이 정부기관이다.

흡인력이 기업보다 500% 강한 것이 정부부처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현실이다. 사실 소통은 정부의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간에 잦은 교류와 정보교환이 산 정책이 입안되고 발전 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요, 국가 발전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급도시가 되고도 남는다.

<<주>경농 광주지점 보급소장

면단위 초등학교 없는 곳 수두룩...농촌 홀대인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문제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있던 학교마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폐교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면이 전국에 21개 면이나 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나 기계적인 수치만으로 따져 폐교 여부를 결정하고, 농촌교육을 홀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농촌교육의 양적 질적 향상과 특화도 도시에서 유학까지 가는 농촌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들은 농민 자녀들을 위해 학생수에 상관없이 농촌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농촌 서비스 표준까지 만들어 일정거리 이내에 반드시 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한선희·목소리 놀도동

기고

이경식



최근 들어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 협약에 의거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커져 국가적으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국가별 탄소배출량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우리가 쉽게 온실가스라고 표

국립공원 녹색 숲 복원은 미래를 위한 일

현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각종 환경재해가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발생량 감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 국토면적의 2/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바다와 산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왔다. 지난 시절 도서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색과 육상과의 이동수단이 원만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땀감으로 사용하고, 난방연료가 화석연료로 대체된 이후에는 도서지역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축방목을 장려하기도 해 지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자연생태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사책에 부응하고 도서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해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의 녹색 숲 복원사업은 과거 도서지역의 무단 방목된 가축으로 인한 도서의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무더기 방목된 염소 등을 구제하고 염소 등의 무분별한 식이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에서는 신안군과 진도군 국립공원지역내에 무단 방목된 염소 등 934마

리 중 지난 6일까지 371마리를 구제하였으며, 11개도서 14개지역에 상록활엽수 5만5천여주를 식재했다. 또한, 경관 및 상록성감 감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중요하다.

추후에도 도서의 녹색 숲 복원을 위한 자생 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하고자 3개소의 묘포장을 조성하여 지역적응성이 뛰어난 우량자생수종을 육묘하여 상록활엽수 식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발생 저감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황폐화된 도서지역을 수목식재로 복원시키는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녹색 성장과 탄소발생량 저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인터넷 직거래 사기판매자 처벌수위 강화 해야

며칠 전 지방에 사는 언니가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다.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물건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다른 곳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내놓은 판매자를 발견했다. 게다가 “현금 결제시 10% 할인, 전화 요청”이라는 판매정보를 보고 판매자에게 문의해 구입의사를 전했다.

그 후 판매자는 이 제품의 할인가간이 끝나기 전에 사기를 사들여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네댓 번이나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서

둘러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이런 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정보통신 사회는 퇴보하고 말 것이다. 관리자 쪽에서도 “판매자와 별도 연락을 통해 직거래를 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판매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

<<최순옥·광주시 북구 운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한선희·목소리 놀도동